

Policy



ISSUE

2018
정책이슈리포트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관련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U

E

REPORT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관련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진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4
II) 사회혁신 및 시민사회 조직의 개념과 역할	06
1) 사회혁신 개념 및 특징	06
2) 시민사회 조직 개념 및 역할	08
3) 사회혁신 추진관련 시민사회 조직 관련 정책 현황	10
III) 시민사회 조직 현황 및 한계	15
1) 경상남도 지역 현황	15
2)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현황	16
3)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시사점	20
IV)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22
1) 기본방향	22
2)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23
[참고문헌]	3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 저성장 등의 다중적 위기는 더 이상 정부의 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들 혹은 정부나 시장보다 잘 다룰 수 있는 사회문제들의 해결 기제로써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혁신에서부터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혁신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함
 - 2018년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을 제정추진하고 20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 확산 등 시민주도형 사회혁신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노력중임
- 시민사회는 한국사회에서 90년대 초 중반부터 설립되며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사회혁신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시민사회 조직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고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복원 및 지역사회 활성화,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최근에는 풀뿌리 주민운동, 마을공동체 등 비영리 민간운동과 사회적경제영역 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이 증가하고 있음(윤종화, 2013)

- 시민사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는 정부 의존적인 자원조달 방식으로 인한 자립력 저하, 시민사회 조직의 구체적인 경험 부족, 시장정보 및 전문 인력 부재,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감소, 협력체계 미흡 등은 시민사회조직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수도권이 아닌 경상남도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변화 등으로 시민사회 조직이 일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적 규모에 비해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사회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시민사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및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 조성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가 작동되어야 함
 - 경상남도는 시민사회 역량 및 실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며,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전략개발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고양시키고 시민사회와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음

Ⅱ) 사회혁신 및 시민사회 조직의 개념과 역할

① 사회혁신 개념 및 특징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사회적 필요와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통해 개발되고 확산되는 혁신적 행위와 실천이자, 전략과 조직화된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변동의 과정들임(강민정, 2017)
 - 사회혁신은 독점적으로 정책을 공급하던 정부의 역할을 정책 수혜자(소비자)들에 불과했던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의 주도, 혹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의미함(신준호 외, 2017)
- 사회혁신의 특징으로는 첫째,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 풀뿌리 조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고 시민사회 주도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추진의 동반자인 능동적인 존재로 참여하게 됨
 - 사회혁신의 수혜자(시민사회)가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조직되면 수혜자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영향력을 향상시켜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게 됨
 - 또한 시민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구체화하고 기존에 인지되지 않았던 필요를 발굴할 수 있음
- 둘째, 시민사회가 문제해결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여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행정, 민간기업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수요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의제 발굴 및 정보교환, 필요한 자원을 연결함
 - 시민사회는 네트워크의 확장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하고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강민정, 2017)

- 셋째, 양극화와 빈곤문제, 불평등 심화, 고령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인종·계층 간 갈등, 불확실성, 저출산 등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며 다양한 영역 간 교차, 구체적인 상황 반영, 사회적 가치 내재, 사회적 관계, 시민역량 강화라는 특성을 포괄함
 - 사회혁신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간의 교류, 다양한 영역 간 협력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시민사회 공동체가 형성·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사회혁신은 이미 시민운동, 사회적 경제운동, 사회복지 운동 등의 형태로 여러 현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사회혁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0대 사회혁신 사례로 개방대학(Open University)과 옥스팜(극빈자 구제), 공정무역, 여성운동기구, 그린피스와 생태운동, 리눅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금융, NHS 다이렉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주민참여 예산모델이 있으며, 그 외에도 커뮤니티 매핑, 빅이슈, 리빙랩 등 혁신을 도모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 등 사회혁신 분야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들을 위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음
- 시민사회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조직이 성장·발전하여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EU가 추진한 TEPSIE(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¹⁾에서 사회혁신 생태계 구성요소로 ① 구조적 조건, ② 중간지원조직, ③ 행·재정적 지원 및 교육, ④ 시스템 강화 및 지식기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음
 - OECD는 ① 시민과 정부 간 경계의 파괴, ②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 활용, ③ 신기술과 인간지식 결합을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음

1) 유럽에선 여러 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혁신의 이론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② 시민사회 조직 개념 및 역할

-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등장하였으며, 상호호혜적인 영역과 이익집단과 같은 자원결사체의 영역, 그리고 공론장으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의 영역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역임(임현진, 2015)
 - 자발성과 상호호혜성의 원리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등의 시민사회는 풀뿌리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임
 - 시민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시민사회 내 상호관계를 맺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특권화하지 않고 조직 전체의 공동체적 이익을 고려하는 상호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조직을 말함
- 국내 시민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권교체, 사회구조의 다원화, 개인욕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는 참여방식이 다양화되었고, 조직 구조가 유연하게 변모되고 있으며(박상필, 2015)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전통적인 결사체 외에도 각종 SNS서비스 혹은 플랫폼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통과 참여가 자유롭고 용이해졌으며, 온라인 단체의 증가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영향력이 매우 커짐
 - 촛불집회와 같이 일정한 주제에 따라 소수가 일시적으로 만든 유연한 조직이 확대되고 소수 또는 1인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음
- 즉 시민사회 조직이란 비정부 혹은 비영리영역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NGO, NPO, 시민단체, 풀뿌리 주민운동,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사회적 경제²⁾ 등 다양하게 분화하는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함
 - 또한 공식적인 조직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및 신뢰관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임현진, 2015)
 - 2018. 3. 8.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 법안」은 시민사회 조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자원봉사조직 등

I [표 2-1] 시민사회 조직 I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은 제외한다)
- 「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인가받은 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을공동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 그 밖에 3인 이상의 구성원을 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

- 시민사회는 국가 정책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공공영역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Harbermas 2001) 동시에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민 이니셔티브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서울시 NPO지원센터 품다, 2017)
 - 시민사회 조직은 사회문제해결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지원과 의견수렴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요한 주체임
 - 또한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슈를 이해하게 하며, 공공정책과 시민 권한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형성과정에도 효과적으로 개입하게 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시민사회 조직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① 조직형태 및 역량, ② 재정 역량, ③ 나눔과 기부, ④ 연대와 협력, ⑤ 인적·물적 자본, ⑥ 시민참여 및 시민교육 유무, ⑦ 제도와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조직의 개념을 토대로 한 시민사회 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의존에서 탈피하고 자립·발전하여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와의 타협을 전제로 시민참여를 모색해야 함
 - 둘째,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분권화 등 사회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조직은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핵심주체로서의 역할과 공공적 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음(김정희, 2016)
 - 셋째, 지역 내의 신뢰와 협력 등을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넷째, 기후변화, 불확실성, 복합화 등 시대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난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조직의 내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위와 같이 시민사회 조직의 역할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조직이 성장·발전하여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3 사회혁신 추진관련 시민사회 조직 관련 정책 현황

⑧ 시민사회 조직 관련 법제도 및 정책

- 문재인 정부는 주민주도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시민사회 토대 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다양한 시민의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 조직을 총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시민사회발전법)을 발의함

Ⅰ [표 2-2]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주요내용 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발전재단 및 기금 설치·운영
-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 세종타임즈, 진선미 의원,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2018.3.23.

- 또한 시민사회 토대를 강화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Ⅰ [표 2-3]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 Ⅰ

구분		내용
국정과제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국정과제8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혁신관련 기본법(가칭) 제정('18) • 민간중심의 사회혁신기금 조성('19) • 민간주도의 사회혁신조직인 사회투자재단 신설('19)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 민간 사회혁신 주체에 대한 지원, 역량강화 •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벤처형 협업조직 G-Lab도입 • 민간과 지자체의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국정과제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 시민참여형 사회혁신기금 조성 •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조성 • 사회적경제 학습사회 구축 등 인재양성 지원 • 유휴국공유시설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용을 위한 정부공유 플랫폼 개발
국정과제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하여 뉴딜사업을 위한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강화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치 활성화 •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 주민중심의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읍면동 체제 구축('17) • 공동체 활성화 지원(마을리더,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및 지원)

※ 이태수(2017), 문재인정부 정부 출범과 시민사회의 과제

- 서울시와 충남도의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음

Ⅰ [표 2-4] 시민사회 관련 공익활동 촉진 조례 Ⅰ

구분	목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민 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시행 2015.10.30.] [충청남도 조례 제4034호, 2015.10.30.,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경상남도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구상 중임

Ⅰ [표 2-5] 경상남도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Ⅰ

-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구축과 운영비 지원
-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 지속적인 주민참여 방안 마련

※ 경상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계획(안)

⑧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 사례

- 서울시에서는 혁신가(시민사회조직 포함)에게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과 시민에게는 특별한 배움과 놀이가 있는 창의공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사회혁신을 체험하고 혁신실험을 창조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소통협력 및 혁신실험공간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함(서울혁신파크, 2017)
 - 서울혁신파크를 통해 혁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여 새로운 실험들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혁신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혁신네트워크의 개발·연계, 혁신가 및 시민사회조직 유치, 공간 운영을 통한 소통 및 지원하고 있음
 -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서울혁신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스페이스살림, 사회혁신 리서치랩 등 각 분야의 사회문제 해법을 사회로 확산시키는 코디네이터 그룹을 통한 사회혁신의 허브 공간을 조성함
- 미국 시카고에서는 스마트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데이터를 GIS 위치기반 정보로 전환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여 ICT기반 플랫폼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정보분석, 대응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함
 - 시카고시 콜센터(311) 기록, 911기록, CCTV 카메라 기록, 버스 위치정보 등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과 연구기관이 적극 공유하여 기존 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공공서비스 등 당면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⑧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 사례

- 전북 정읍의 송죽마을에서는 마을 모시작목반을 구성하여 모시잎을 수확하고 수확한 모시잎은 마을기업인 솔티를 통해 전량 구매하여 모시떡을 만들어 판매하여 지역 일자리 및 수입을 창출하고, 마을 어르신들에 매달 10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8)
 -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체험과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여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존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 모델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영국 런던의 스페이스하이브(Spacehive)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공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협력해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제를 설정하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음(<http://www.benefit.is/18330>)
 - 기존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프로젝트가 예산이나 처리과정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이 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의 문제를 극복함
 - 시민은 지역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펀딩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기존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주요투자자로 포함됨
 - 대표적인 사례로 맨스필드(Mansfield) 무료 와이파이 제공과 글린코치(Glyncoch) 커뮤니티 센터 재건축, 리버풀(Liverpool) 고가도로 공원조성 등이 있음

Ⅲ) 시민사회 조직 현황 및 한계

① 경상남도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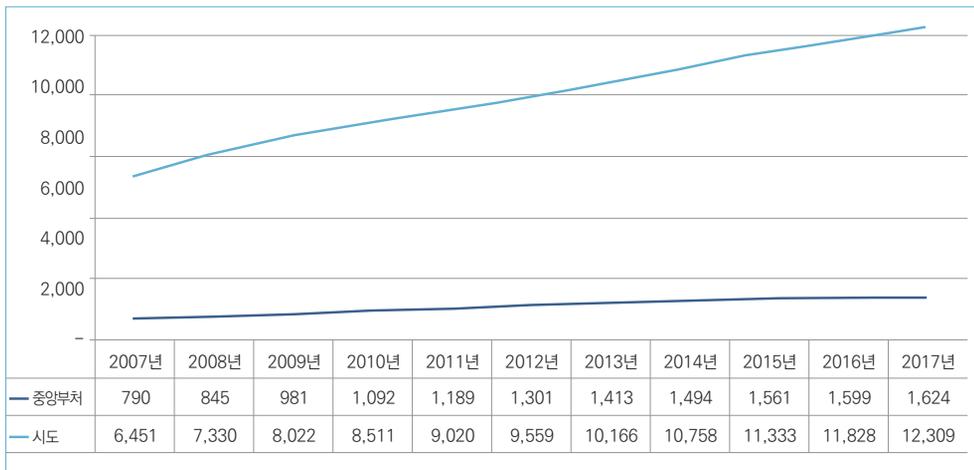
- 경상남도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지대로 발전하면서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정재희, 2018)
 - 경남의 지역구조는 동부 도시권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산업도시 축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창원, 김해, 양산, 거제와 같은 동부 도시권은 산업화 정책의 수혜지역이며, 진주, 사천을 제외한 서부권 군 지역은 대부분 농어업 중심의 1차 산업, 영세한 3차 산업 구성으로 지역 활력 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정재희, 2018)
 - 또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실업자 증가현상도 경제적 불균형구조 속에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경제규모 및 인구의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균형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남도의 경제활동인구는 경기, 서울시에 이어 국내 3위('17)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GRDP) 4위, 지역총소득(GRI)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서부경남 新경제권 구축,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정주여건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선도도시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이뉴스투데이, 2018.12.5.)

- 그러한 경제규모나 인구에 비해 시민사회 조직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며, 지역적 편차는 다분히 경제적 불균형을 넘어 시민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의 산업구조 양상과 변화된 인구변화,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의 다양한 사회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시민사회 조직의 혁신을 위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2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현황

- 시민사회 조직은 시민단체와 풀뿌리단체(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조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중앙부처³⁾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790개('07)에서 1,624개('17)로 106%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6,451개('07)에서 12,309개('17)로 91%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1 [그림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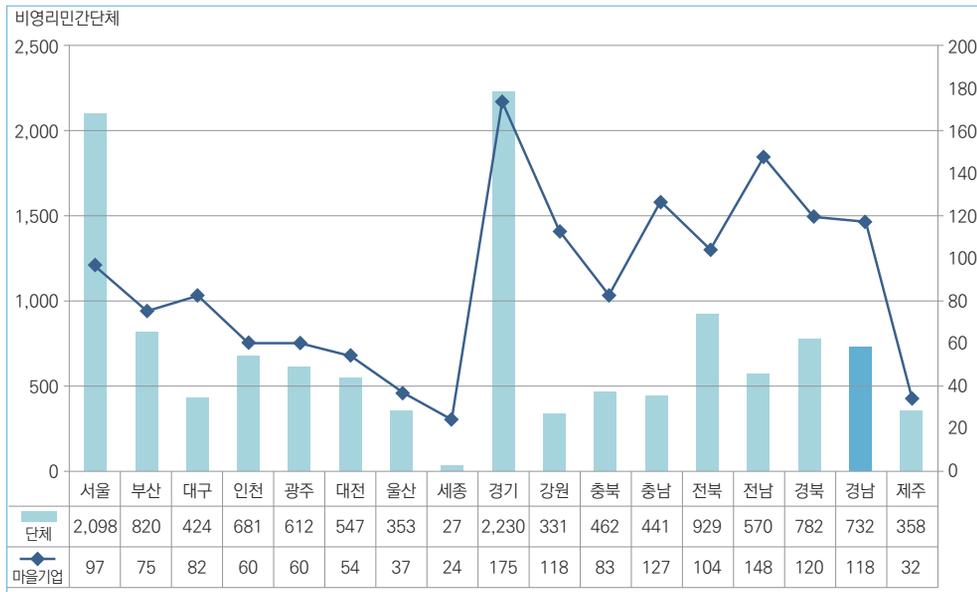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3)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등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 경상남도 비영리민간단체는 2018년 3월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732개로 5.9%(6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118개로 7.8%(5번째)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2,397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었으며, 그 중 경기(2,215개, 18%)와 서울(2,071개, 16.9%), 전북(926개, 7.5%), 부산(815개, 6.6%), 경북(774개, 6.3%), 경남(732개, 5.9%) 순이며, 그 중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전체 40.4%(5,009개)로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마을기업은 총 1,514개로 그 중 경기(175개), 전남(148개), 충남(127개), 경북(120개), 경남(118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은 지역은 마을기업의 조직수도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비영리민간단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나, 경남의 경제구조 및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시민사회 조직이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전체로 확장되지 못하였음

Ⅰ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및 마을기업 등록 현황 Ⅰ

(2018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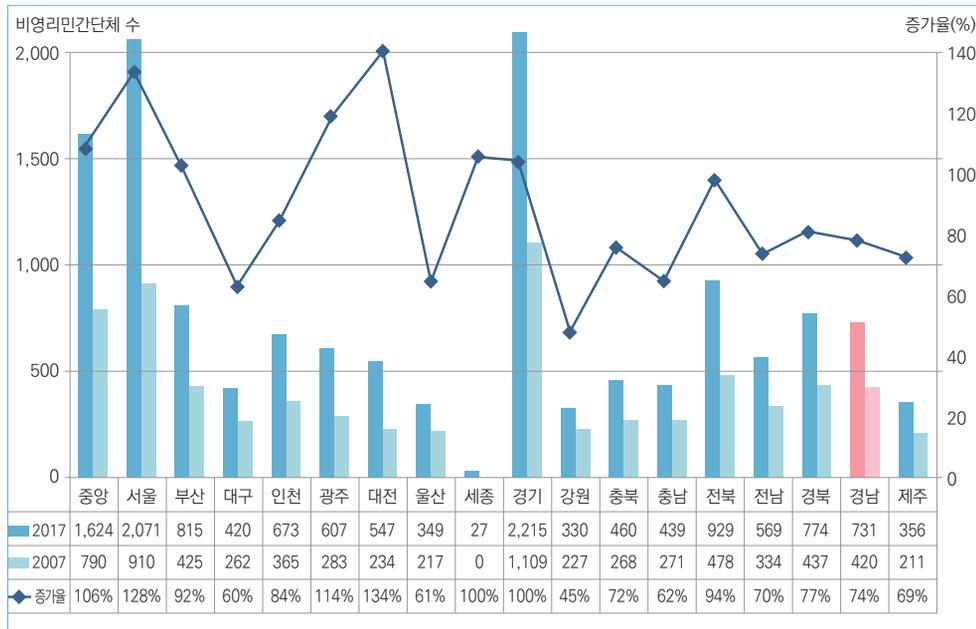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경남은 2007년 420개에서 2017년 731개로 7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양적성장을 의미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증가율 평균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동부권의 산업화정책, 서부권 및 그 외 군의 농업·영세한 산업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공동체형성 및 시민사회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 경남 시민사회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위한 플랫폼이 부재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조직의 운영에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Ⅰ [그림3-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Ⅰ

(2017년, 2007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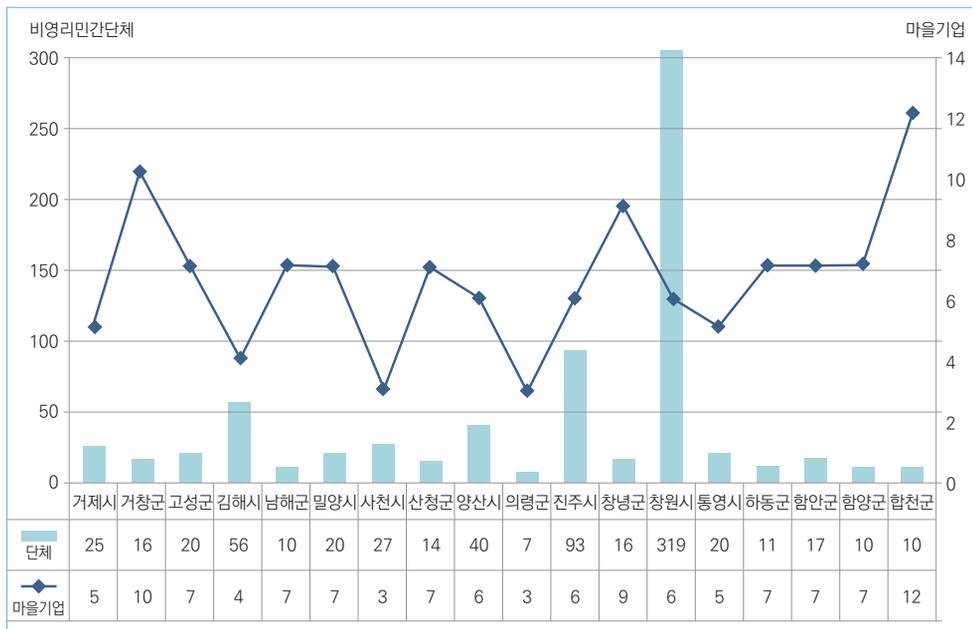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 경상남도 시·군별 비영리민간단체 및 마을기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창원시가 319개로 경상남도 전체의 43.6%를 차지하는 등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컸으며, 마을기업은 합천군이 12개로 전체 10.2%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창원시가 319개(43.6%), 진주시가 93개(12.7%), 김해시가 56개(7.7%), 양산시가 40개(5.5%) 순이며,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가 30개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마을기업은 합천군이 12개(10.2%), 거창군이 10개(8.5%), 창녕군이 9개(7.6%), 산청군과 밀양시가 7개로(5.9%) 순임

Ⅰ [그림 3-4] 2017년 경상남도 시·군별 비영리민간단체 및 마을기업 등록현황 Ⅰ

(2018년 3월 31일 기준)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3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시사점

-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 경남도 시민사회 조직은 타 광역자치 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나, 경남도의 경제규모나 인구에 비해 지역공동체 및 시민 사회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지 못하였음
 - 경남은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위한 플랫폼 부재와 제도적 기반 약화 등의 여건으로 인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경남 시민사회 조직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지역의 경제적 불균형 심화로 인해 시민사회 조직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시민사회 조직의 지역적 편차는 지역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어업 중심의 1차 산업, 영세한 3차 산업으로 구성된 지역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와 시민사회 조직 인프라 부족, 인적자원 확보의 미흡 등의 이유로 시민사회조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경남 지역의 산업구조 양상과 변화된 인구변화,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은 시민사회 조직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부 재정의 의존도 심화 및 독립성 결여, 조직 안정화 취약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그 외에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협력 및 네트워크구축 미비, 행정 처리의 어려움, 시민사회조직의 역할 감소 등이 있음
- 경남 시민사회 조직의 시사점은 경남도 시민사회 조직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시민사회 활동은 지역성을 기초로 생활 속 문제의식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호혜·연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하나의 시민활동, 시민사회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사회 조직 구성원의 일부는 정부정책의 홍보 또는 중간지원 센터 등의 정보제공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불어 각종 설명회나 포럼 등을 통해 학습되고 역량을 제고하여 동기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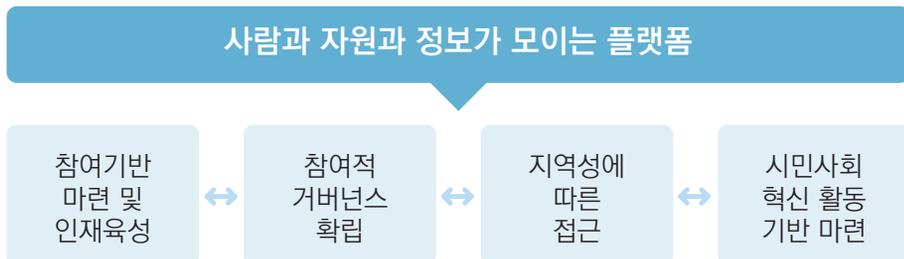
- 지역 내 활동가 및 시민사회 조직은 공익활동을 하는데 있어 인적자원을 비롯하여 물적자원(활동공간마련, 물품대여, 네트워크 등)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미비로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과 영세산업 위주의 군의 경우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부재하고 참여의 기회가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지원센터나 시민사회활동의 활동 지역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혜가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음
- 많은 시민사회 조직들은 여건상 독자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으며,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와 연대 사업들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다양한 사회적 여건을 극복하기 하고 경남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도민 및 시민사회조직이 사회적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켜야 할 것임
 - 둘째,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의 지역적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시민사회조직 및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협력과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인재양성 등 시민사회 관련 정책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임
 - 셋째, 경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중간지원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역할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시민사회조직으로의 역량을 고취시켜 내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넷째, 다양한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를 육성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시민사회 조직이 생겨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컨설팅, 모니터링 등)와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IV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시민사회 조직의 활성화는 조직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의 정치·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공공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
 -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는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상위의 관점에서 각 정책이 조절되고 융합되어야 함
 - 또한 도·농 복합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지역적 격차가 큰 경상남도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 지역별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현황 및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혁신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정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전환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서는 사람(인적자원)과 자원(물적자원), 정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통한 공익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되고 있음(김종수 외, 2018)

I [그림 4-1]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I



-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경상남도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사람과 자원과 정보가 모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① 도민 참여기반 마련 및 인재육성, ②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③ 지역성에 따른 접근, ④ 시민사회 혁신 활동 기반 마련으로 함
 - 첫째,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굴·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 및 플랫폼을 조성해야 함
 - 둘째, 시민사회 조직의 통합적 접근과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장하여 시민사회조직이 사회적 자원을 극대화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셋째,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정도, 지역 시민사회 조직 특징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넷째, 시민사회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변화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① 참여기반 마련 및 인재육성

- 시민을 포함한 시민사회 조직이 시민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굴·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 및 플랫폼을 조성해야 함
 - 시민사회조직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도민이 시민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활동가와 시민, 시민사회조직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시민사회조직을 통한 사회혁신 및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지역 내 '시민사회 혁신 프로젝트' 등의 공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조직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책적 측면에서는 행정주도의 기존 온라인 정책참여 방식을 도민 주도 참여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문제를 발굴·제안하고 토론 등을 통해 정책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임

Ⅰ [표 4-1] 경상남도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 참여 기반 마련 Ⅰ

참여 기반 마련

- 소통·협력 거점 공간 지원
- 시민사회 혁신 프로젝트 공모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주도 참여 온라인 플랫폼

-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한 인재 양성은 시민사회조직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리더로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조직이 네트워크에 기반한 안정적인 조직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시민사회 조직 내에서 사람을 자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사람을 성장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공익활동의 확장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인재양성은 시민사회영역에서의 후속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역량과 경험을 키워주는 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조직이 자립·성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리빙랩, 연구모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 시민사회 조직이 주도적으로 학습조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일회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지원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관(중간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대학, 전문교육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단위에서 교육·학습 프로그램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설명회 및 토론회, 집담회, 심포지엄, 사례발표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혁신과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조직들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 등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활동가의 인건비 보조금 혹은 교육비 지원,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Ⅰ [표4-2] 경상남도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 Ⅰ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

- 리빙랩, 연구모임 지원
- 체계적인 교육·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설명회 및 토론회, 집담회, 심포지엄, 사례 발표회 주기적 개최
- 활동가 재정적 지원 보조

🔗 참여적 거버넌스 확립

- 시민사회조직이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행위주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유대와 네트워크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성을 지닌 영역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과 사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적극적인 유대와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활동의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며,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의 시민성을 성장시키고 시민사회조직의 안정된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함
- 시민사회조직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참여적 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 협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도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협치 모델을 개발·추진하여야 하며 민·관 공동협력사업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민·관 협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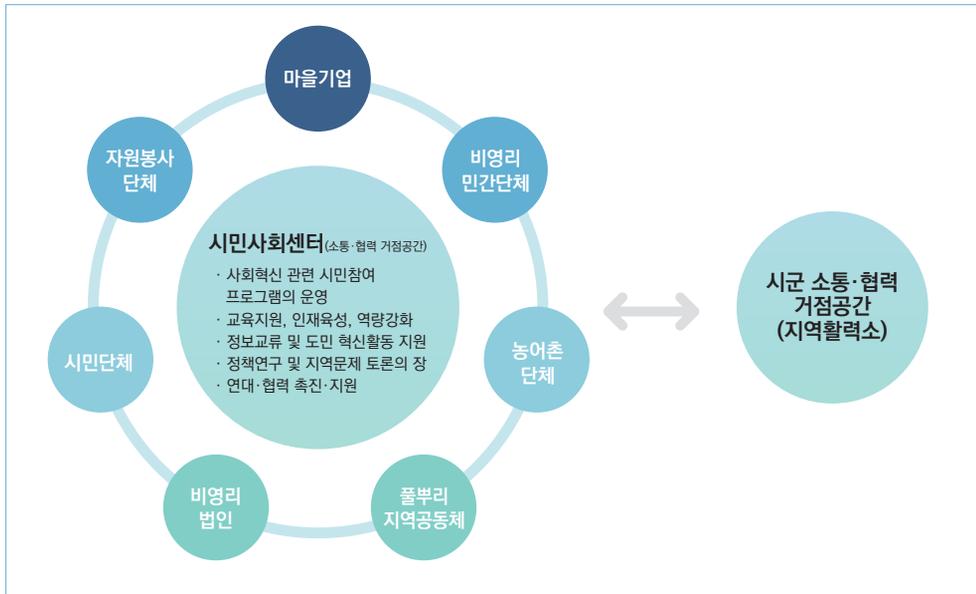
Ⅱ [표 4-3] 경상남도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 참여적 거버넌스 : 민·관 협력체계 Ⅱ

참여적 거버넌스 : 민·관 협력체계

- 민·관 협치 모델 개발·추진
- 민·관 공동협력사업 과제 발굴·추진
- 융·복합 거버넌스 회의

- 시민사회를 확장하고, 시민사회가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영역을 거버넌스로 융·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의 소통협력 거점공간으로 시민사회센터가 요구됨
 - 시민사회조직은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농어촌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지원, 사회적경제, 동네자치, 농촌 만들기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시민사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민사회센터(중간지원센터 등)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경험과 노하우, 자원들을 거버넌스로 융·복합하여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
 - 시민사회센터는 시민사회 활동의 소통·협력 거점 공간이자 집적공간으로서 사회혁신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정보교류, 정책연구, 지역문제 토론의 장, 도민 혁신활동 지원, 연대·협력 촉진·지원 등을 통해 시민사회조직의 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임
 - 시·군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시·군 소통 거점공간(마을활력소 등)이자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활동가 혹은 공무원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시·군 소통 거점공간이 중간지원센터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Ⅱ [그림 4-2] 경상남도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 참여적 거버넌스 : 시민사회센터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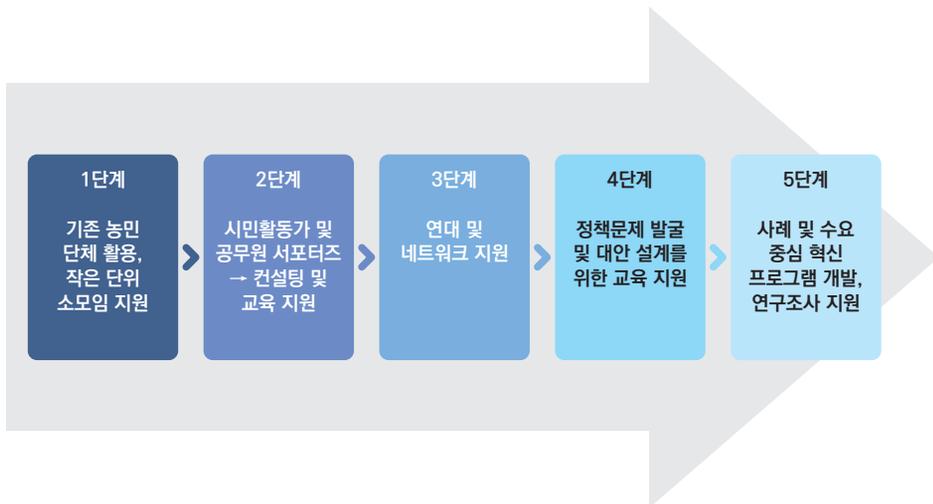


⑧ 지역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

-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조직으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요구됨
 - 경상남도는 경제적 규모 및 인구, 시민사회조직 등의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을 설계·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함
 - 시민사회 조직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위해서는 지역 및 시민사회 조직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현황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본 연구를 통한 경상남도의 지역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1 단계 :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시민 참여 및 시민사회조직 형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기존 단체(농민조직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 하며, 시민 활동가 및 작은 단위의 소모임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형성을 지원해야 함
 - 2 단계 :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인적자본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시민활동가 혹은 공무원 서포터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3 단계 : 시민사회 조직이 운영되는데 있어 물적 토대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시민사회 센터 혹은 다양한 영역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4 단계 : 시민사회 조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적절한 사회혁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5 단계 : 시민사회 조직이 비교적 원활하게 활동한 지역의 경우 다양한 사례연구를 비롯하여 수요중심의 혁신프로그램 개발(리빙랩, 커뮤니티 맵핑 등), 시민사회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Ⅰ [그림 4-3] 경상남도 지역성을 고려한 단계별 접근 방식 Ⅰ



8 시민사회 혁신 활동 기반 마련

-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및 시민사회조직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라는 상위의 관점에서 각 정책이 조절되고 융합되어야 할 것임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기업사업, 사회적기업, 농어촌사업 등의 사업 추진과정 및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야 하며 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차원의 시민사회조직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시민사회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변화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민사회 관련 조례제정, 시민사회 역량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경상남도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시민사회 역량 및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전과정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사회혁신 추진관련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조직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정책 기획 단계부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Ⅰ [표4-4] 경상남도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시민사회 혁신 활동 기반 마련 : 제도적 환경 Ⅰ

시민사회 혁신 활동 기반 마련 : 제도적 환경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 시민사회 역량 및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실시
- 사회혁신 추진관련 발굴시스템 구축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사회 조직 전과정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및 모니터링단 운영
- 사회혁신 추진관련 행정협의회 구성

-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문에서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사회조직이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및 시민사회 조직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시민사회 조직의 공익활동은 시장을 통한 경제적 보상이 미흡하여 자발성에 기인한 자체재원으로는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요구됨
 -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방식인 단년도 예·결산 제도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수혜대상인 단체 간 협약 등을 통해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보조금을 투·융자 방식(정책금융)⁴⁾으로 전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이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공제·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 조직 관련 재단 설립을 통해 보조금(일반회계), 부담금(준조세), 타기금(복권기금 등), LGIP(Local Government Investment Pool), 공공기관 여유자금풀 등의 운영을 통한 자원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임

4) 지역별 사회투자재단 혹은 지역재단 등 인내자본으로 장기 저리 혹은 무이자 융자, 온랜딩 방식의 투·융자 등의 방식

참고문헌

- 강민정, 2017,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WP 2017-04
- 김종수 외, 2018, 도농복합 충남도에 적합한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박상필, 2015,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 NGO 연구, 제10권, 제2호(2015), 35-38
- 시민사회 활성화 집담회2, 201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서울시 NPO지원센터 품다, 2016년 7월 19일, 발표자료
- 서울혁신센터, 2017, 상상이 현실과 만나는 수천가지 이야기(서울혁신파크 가이드북), 2017, 서울시 세종타워즈, 진선미 의원,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2018.3.23.
- 신준호 외, 2017,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윤종화, 2017, 대구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대구시민센터
- 이태수, 2017, 문재인정부 정부출범과 시민사회의 과제, 2017.09.2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발표자료
- 임현진, 2015,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NGO의 과제 - 학술원 논문집, 54(2), 2015.117-152
- 정미나, 2016,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 사회혁신의 특성과 사회변화, 월간 사회혁신의 시선, 2016 10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2016.11.17
- 정선애, 2017,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2017.09.2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발표자료
- 정재희, 2018, 혁신과 포용, 협력의 가치를 담아내는 지역개발, 경남발전, 2018.6, Vol 143
- 진선미, 2018,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2018.3.8 진선미의원 대표 발의
- 조철민, 2016,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태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활동, 신학과 사회, 30(1), 2016, pp. 355-396
- 채종현, 2018, 새 정부의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슈 페이지, 통권 61호
- 황영모, 김수은, 2017, 사회혁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방안, 정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017.12.20. VOL.24